

6장 국가 부재와 감정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사회

김동춘

김동춘

사회학자.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와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비판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한겨레신문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쟁정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대한민국 잔혹사』,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분단과 한국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여러 편의 학술논문을 썼다. 저서 가운데 『전쟁과 사회』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이 뽑은 '한국의 책 100권'으로 선정, 2010년 '동아시아 100권의 인문도서'로 선정되었다.

1. 국가라는 물음: 안보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과연 왜 해경은 '골든타임'에 탑승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글의 논의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의혹은 남아 있고 사실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만 사고가 '참사'로 바뀐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민의 84.7퍼센트는 이런 재난 사고가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약 64.4퍼센트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해 12월 1일, 501 오룡호가 침몰했고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

도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이 된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발언, 즉 “규제는 암 덩어리이며,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¹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도 국가와 정권이 겹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느꼈다.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챈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이 교과서에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상의 조항이 실제와는 무관한 공허한 언명이라는 점이었다. 국민들은 또 다시 그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우울하게 전망했고, 자신이 위험에 빠져도 국가나 정부의 구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새삼 확인했으며,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그러나 재난 앞에서 국가와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를 처음 목격한 청소년들이 느끼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은 그 어떤 언어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다.

성격과 양상은 다르지만 한국사회에는 수십, 수백만 명의 유사 체험자가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 아예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각각의 체험은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체험이 공식적이고 집합적인 기록과 기억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² 대참사의 경험과 학습은 법·제도·관행·의식의 변화를 가져 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직접 겪어야만 국가와 정부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잠재적 위험이 실제 닥쳤을 때야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학습 부재 사회’의 비극이다. 이미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 비극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아직 비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비극을 겪은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차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반의반의 인민주권

나는 우리가 체험하고 목격한 세월호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정부의 모습이 한국인이 ‘반의반의 주권’, 즉 4분의 1의 주권만 누리고 있는 데서 초래된 것이라 본다. E.E. 샤프슈나이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절반의 인민주권’밖에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³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인민의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기업권력이 정부를 압도하여, 결국 인민은 자신의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 “폐허에 성난 눈만이 서성인다”, 《한겨레21》 1009호, 2014. 5. 5.

2 김영오, 『못난 아빠: 이재야 철이 드는 못난 아버지입니다』, 박태욱 글꾸뭉치, 부엔리브로, 2014.

3 E.E. 샤프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현재호·박수현 옮김, 후마니타스, 2008.

인민주권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전쟁과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행정권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하고, 인민은 원치 않는 전쟁에 참전해야 하며, 경제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도 보장된 나라에서는 국가가 징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통해 하부구조 혹은 헤게모니적 힘(infrastructural/hegemonic power)을 갖고 있으며, 국가가 재정 능력(하부구조/헤게모니의 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하부구조의 힘은 억압적·전제적 힘(despotic power)과는 다른 것인데, 밑으로부터의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지 못한 후발 국가, 특히 식민지 억압기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발국가에서는 억압적 기구의 힘은 강대하나 하부구조의 힘은 매우 취약하다.⁴ 그래서 지주나 자본가 등 사익 집단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군, 경찰, 검찰 등 억압기구를 사익을 위해 편향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특정 지주친족집단은 지역사회의 경찰력이나 공권력을 압도하고, 마피아 집단과 연결된 멕시코와 러시아의 거대 자본은 사법체계를 비웃는다.

하부구조의 힘이 있는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이 '안민(安民)'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훈련된 요원, 책임 있는 관료,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도 빈곤에 덜 시달리고 차별 대

4 하부구조 혹은 헤게모니의 힘, 억압적 힘의 구분은 마이클 만의 이론에서 따온 것이다. Michael Mann,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s and the Results," John A. Hall ed., *States in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6.

우를 덜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덜 훼손당하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이런 기반마저 흔들었고 복지국가는 지향과 목표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개인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자본 활동에 훨씬 큰 '자유'를 부여하게 되었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당하는 재난(해고)은 물론 일상에서 개인이 당하는 위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국민들로 집중되었다. 신자유주의 국가가 낳은 '위험의 외주화'와 '구조의 영리화'는 '재난 피해의 계급화'를 낳은 것이다.

복지국가의 경우와 달리, 냉전이후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인민주권이 이미 큰 제약을 받고 있었다. 하부구조의 힘보다는 억압적 힘이 강했거나, 미국식 국가 개입주의가 영향을 미쳐 때로는 19세기식 자유주의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고, 식민지적 억압국가의 전통과 전쟁 중이라는 명분이 이들 나라에서 인민주권을 제약했다. 일본, 대만, 한국으로 집약되는 이 국가들은 냉전 시기에 전선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역사와 배경과 조건은 서로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과 노조 조직률이 낮으며, 힘 있는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과 한국은 사실상 안보/전쟁국가였으며, 안보가 가장 일차적인 국가과제였고, 바로 그 명분을 내세워 수사정보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고 막강한 정치적 힘을 행사했다. 물론 식민지였던 대만과 한국은 제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과는 주권의 양과 질에서 이미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요컨대 한국은 인민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억압적 국가의 역사적 경험(식민지 지배체제와 분단), 전근대 이래로 사회문화적 전통으로 내려온 가족주의(가족 책임과 성취주의 문화), 아래로부터의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제약과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만성적인 전쟁 상태(북한과의 대결 구조)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절반의 주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실상 '반의반의 주권' 상태에서 출발했다. 철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전쟁과 억압적 개발독재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개인 책임, 가족 책임으로 귀속되었고, 사회 연대의 해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사적 생활에 침잠하는 일은 거의 강요된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안보 국가/개발독재 아래서 국가나 정부에 저항하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은 적으로 취급되어 학살과 고문, 투옥, 해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과거의 좌익 경력자, 자신을 비판하는 항일운동가, 반정부운동에 동조했던 보통의 국민들까지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했고, 4·19 당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박정희 정권은 적극적인 개발주의 동원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 학생과 노동자 들을 간첩 조작과 처형, 고문으로 처벌했다. 반대자를 대량 학살하는 방식에서 폭력과 사법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기조는 전쟁의 방식으로 반대자를 없애는 것, 즉 필자가 강조한 '전쟁정치'의 계속되는 실천이었다.⁵ 단, 국민들은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았고 '좌익'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위협하지는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은 집권 과정에

서 정당성의 결여, 그로 인한 정권의 불안정과 반대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었다. 실제 분단하에서 한국은 출발부터 미국에 군사·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반(半)주권국가였기 때문에, 인민이 국가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대외적 주권 제약의 다른 표현이었다. 민주주의가 취약한 정권은 강대국이나 해외자본에 더 의존적일수록 자국의 인민들에게 더 폭력적인 법이다. 한국계 기업의 활동에 항의한 자국 인민을 살해한 캄보디아 경찰이나,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 항의한 철거민을 살해한 인도 경찰, 미국 석유회사를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군경의 행동도 그런 것이다.

한국처럼 국가 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도입되고 각종 공안기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과거 안보/전쟁 국가에서 민주화의 착실한 진전에 따라 반의반의 주권이 절반의 주권에 근접하는 양상도 보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개발독재의 유산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된 20세기 후반 이후에 또다시 '반의반의 주권으로' 후퇴했다. 기업에게는 과도한 '주권'이 부여되는 데 반해 노동자와 약자에게는 과소 '주권'이 부여되었다. 일반 국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동원의 대상이자 권력에 복종해야 할 존재였다.

그래서 안보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연속적인 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이 급작스럽게 '기업사회'로 변환한 것은 병영사회라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5 김동훈, 『전쟁정치』, 길, 2013 참조.

했으며 양자는 연속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⁶ 병영사회에서는 억압 권력에 의해 인권과 시민권이 제약되고, 기업사회에서는 국가의 하부구조가 축소되고 기업이 사회를 장악함에 따라 개인의 시민권을 무력화함으로써 인민주권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아직 냉전 분단이 지속되는 한국과 대만 등 결손 국가에서는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한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비행동’과 계급 편향성

전쟁/안보 국가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상실이 억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국가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상실은 국가의 취약한 하부구조의 힘, 혹은 국가의 ‘비행동’에서 주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부작위 혹은 비행동에는 ‘계급 편향성’이 있다. 국가는 공권력을 행사해서 인민을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거대 이익집단 같은 사적 권력이 과도한 힘을 행사하도록 방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국가가 자원 동원이나 권력 행사를 포기한다. 그런 한편, 국가는 국가와 법의 이름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억제한다. 즉, 부작위 혹은 비행동을 함으로써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자들을 국가가 의

6 김동춘,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기업사회의 변환과 과제』, 길, 2006.

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이다.⁷

이처럼 공권력의 보호망, 제도와 법 밖에 방치되어 있는 인민들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를 만나면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이 사설 해양구조업체인 언딘에게 수색과 구조 업무를 맡기고 민간 잠수사의 자발적 구조 활동을 금지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팽목항 주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동원해 물 위로 떠오른 수십 명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구조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구조 과정이 너무나 어이없기 때문에 만약 그 때 해경이 오지 않았다면, 즉 차라리 국가의 기능이 아예 없었다면 (어민들이 침몰하기 직전에 배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명은 더 구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⁸

미국의 태풍 카트리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건을 큰 정치적 사태로 키운 것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잘못이었다. 구조적으로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있지 않은 국가 및 권력 집단이 더 큰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 물론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힘은 나약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카트리나 참사 당시에 미국

7 그래서 서재정 교수는 세월호 사태를 신자유주의 시대의 안보 국가의 실패라고 규정한다. Jae-Jung Suh, “The Failure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ate: The Sewol Tragedy in the Age of Neoliberalism,”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2, Issue 40, No. 1, October 6, 2014.

8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조강원 씨는 “어련히 잘 구조할 걸로 믿었죠. 그런데 그게 천추의 한입니다. 안에 승객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그때 도끼와 망치로 유리창 하나라도 깬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세월호 첫 목격자... 해경만 믿었던 게 천추의 한”, 《오마이뉴스》, 2015. 1. 1.

부시 정부가 대처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중앙 정부의 우왕좌왕과 무관심으로 인해 홍수를 피해 간신히 도망 나온 주민들은 버스를 대엿새씩이나 기다렸으며, 제대로 식량과 구급을 지원받지 못한 채 땡벌에서 노인과 환자 들이 죽어나갔다.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대만, 그들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비참한 실패에도 자화자찬, 이 모든 것은 부시 행정부의 표준행위절차가 되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남부에서 왜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진 이유도 ‘재난의 계급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11 후쿠시마 지진 해일 이후 원전의 피해를 입은 일본 사회 역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민당 정권은 대기업과 결탁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자를 했고, 기업이 제대로 유치되지도 않는 벽지가 원전이라는 극히 위험하고 유해한 시설을 받아들였다.⁹ 기득권을 가진 원전 마피아 세력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지역을 소외하고 방치한 상황이 결국 해일이라는 자연재해가 대규모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 상황은 행정력으로 강담할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한다. 그러나 자연에 의한 위험은 언제나 사회적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권력·제도 등과 결합되어

9 福社家と基本法(究) 井上英夫+後藤道夫+渡治 編著, 『新たな福社家を展望する(社)保障基本法・社)保障憲章の提言』, 旬報社, 2011, p. 20.

피해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고, 위험과 피해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된다.¹⁰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치와 사회의 몫이다. 이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권, 사회, 문명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월호 사건은 바로 한국의 국가, 박근혜 정권, 한국사회, 지배집단의 적나라한 얼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국민’, ‘안보’와 ‘성장’, ‘효율’의 감추어진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시대에 ‘애국’의 기치 아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군대 자원으로 동원해 쓰이던 가난한 ‘국민’들이 이제는 재난 상태에서 구조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반의반의 주권’, 국가의 무책임, 사회적 연대가 결여된 한국 시스템의 한 결과다. 인민주권이 결여된 국가는 때로는 집단 저항을 향해 너무 강대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과도한 개입), 어떤 때는 약자들을 위험에 더 많이 노출시키거나 그들이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제대로 구조하지 않거나 못해서(방치 혹은 과소개입) 그들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¹¹ 이 모든 경우에 국가는 약자에게 잔인한 존재다.

10 Ulrich Beck, *Risk Society*, Mark Ritter tr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pp. 19~84(한국어판: 『위험사회』, 홍성태 옮김, 새물결, 2006).

11 앞에서 마이클 만이 말한 억압적·전제적 국가의 측면과 하부구조적 힘의 측면을 대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의 하부구조의 취약성 혹은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의 결과로 부자들은 위험을 사적 보험을 통해 해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난의 책임: 국가, 정권, 사회 일반, 그리고 개인들

세상에서 일어난 재난 중에서 100퍼센트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도 없고, 100퍼센트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재해도 없다. 그리고 사회 연관성이 있는 재해의 경우에도 100퍼센트 특정 개인의 책임인 경우나 100퍼센트 국가 혹은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경우도 없다. 전적으로 운전자 개인의 실수로 보이는 교통사고도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교통, 신호체계, 단속경찰 배치 등 제도와 구조의 미비점이 있는 법이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재난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가 작용하고, 각 변수의 경중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판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정부나 기업 등 힘 있는 기관이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침묵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원인의 판명이 가지는 어려움과 함께, 책임의 인정과 책임 주체의 규명에도 힘의 관계, 사회의식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한국 노동자 상당수는 산재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렸다.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그런 해석을 요구했고, 피해 노동자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사는 피해자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주고 마무리했다. 소송이 걸릴 경우에도 검찰과 법원은 대체로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돌변시키기도 했다. 같은 해양 기름 유출사고의 책임 처벌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카리브 해의 BP 기름 유출 사건 때 미국은 기업에게 과중한 과징금 처벌을 내렸지만,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후 정부와 법원은 삼성중공업을 봐주었고, 피해 어민들의 생계만 파탄이 났다.

대형 사고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권력 집단이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군주국가인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국방을 강화하지 않은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주체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큰소리치다가 막상 북한이 쳐들어오자 급하게 피난을 가면서, 자신이 서울에 남아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방송을 하고 경고도 없이 한강교를 폭파하여 수백 명을 물귀신으로 만들고 서울에 남아 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책임을 지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서울에 남아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게 부여한 사람들을 골라내 처벌을 했다.¹² 이처럼 힘을 독점하고 있는 가해 측은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내용을 은폐하고 부인하거나 언론을 동원해 ‘희생양 만들기’를 시도한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단 책임자나 담당자를 만들어 처벌하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고의 피해자와 목격자인 일반 국민들이 정부 당국의 구조나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분노를 행

12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중 “제2장 피난” 참조.

등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 연관성이 있는 재해도 아무런 책임 추궁이나 관련자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의 태도와는 반대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도 단지 복잡한 사고 발생 과정의 한 고리에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단원고 교감이 자살한 사건이 그 예이다. 유가족이 갖는 죄의식, 살아남은 학생들을 비롯해 생존자들이 느끼는 트라우마, 그리고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한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것이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모든 책임

사고나 재해의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책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을 갖고 있다. 책임은 특정 기업, 정부기관, 장관, 이웃, 부모, 사회단체에 있을 수도 있고, 제도, 규정, 법 등 추상적인 실체일 수 있으며,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권 혹은 국가일 수도 있다. 특정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기업주가 이윤을 위해 종업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겠지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기업주에게 미미한 벌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기업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정치권력, 검찰, 사법부, 산재 관련법이 더 큰 원인 제공자인 셈이다. 즉 기업주보다는 기업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관행으로 만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만약 배가 과적으로 침몰한 것이라면 선박 연령, 화물 적재 규모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각종 관리감독 조치의 완화·포기를 통해 선박회사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런 규제완화 법을 통과시킨 주역인 새누리당과 집권당에 협조한 야당 등 정치권이 훨씬 큰 책임을 갖고 있다.¹³

미군의 구조 제안이나 민간 측의 구조 의사를 묵살하고도 막상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구조 실패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한국에서 언제나 사고가 '사건'으로 발전되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사고 등 계속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교정되지 않는 이유는 블룸버그 통신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해운협회와 같은 기업가 집단과 정치권 관료들의 유착, 공기업 낙하산 인사 때문이며, 그런 권력집단의 유착을 고발하고 해체할 힘이 야당과 시민사회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정부와 국가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여러 주·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하더라도, 2014년 4월 16일 사건 직후 배의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을 아이들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제대로 구조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한 항해사들,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 주위를 빙빙 돌면서도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이었다. 어린 학생

13 김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민주노총, 2014. 12. 1~2.

들이 “가만히 있어라”는 선내 방송에 따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경의 대처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선원들의 규정 위반, 보고 부실, 승객 안전과 대피 조치의 부재, 해경의 구조 회피, 통영함의 출항 실패, 정부의 거짓 보고와 정보 통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사태에 대한 엉뚱한 사실 파악,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 구조 과정의 거의 모든 것은 현 정부의 책임 사안이다. 그런데 구조 회피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검찰은 탈출한 선원과 선주인 청해진해운의 유명인 사장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진정한 책임 규명을 뒤죽박죽 상태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부작위’의 책임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최고위직인 장관을 임명하고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엉뚱한 처방을 내린 대통령의 행적은 이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해경이 수색보다 대통령 의전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구조 작업보다 상부 보고에 더 치중한 것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직무를 제대로 완수하는 것 이상으로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의 필연적 결과다.¹⁴ 관료조직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 인사권자이므로 관료조직은 이들이 주는

14 채희선, “이상한 해경 인력 배치… 수색보다 ‘윗분 의전’”, (SBS뉴스), 2014. 5. 7.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해 문책당하는 일은 없어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당연히 모든 관료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오직 윗사람의 의중만 고려할 것이다. 이 점에서 초기부터 해경이 상부 보고나 책임 회피에만 신경을 쓴 것은 박근혜 정권의 통치 스타일, 대통령이 평소에 모든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준 신호를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규명되지 않은 지금도 대통령은 ‘부작위’의 책임, 즉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신호’를 줌으로써 구조를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¹⁵ 물론 7시간의 의문의 행적, 국정원이 세월호 내부 수리에까지 개입한 일, 사고 이후 국정원 보고 등 새로운 사실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면 대통령의 책임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재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직후 한강교를 폭파시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이 크게 문제되자 군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대신에 현장 책임자인 최창식 공병감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형했고, 국민방위군에 징집된 장병 수만 명이 죽게 된 사태가 문제되자 지휘관 몇 명을 희생양 삼아 처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출한 선원들에게 ‘살인자’라고 증오를 표시하고 검찰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정부의 무능을 덮고,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렸던 이

15 김동춘, “구조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한겨레》, 2014. 5. 12.

승만 정권의 판박이이다.

사건 이후 검찰과 언론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선박주인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일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세월호 사고가 단순히 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 비난이 해경에 쏟아지자 해경을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구조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길을 가로막았다. 사고 당일에 구조가 가능했던 시점에 구조하지 못하고 허둥댄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모든 공권력 지휘의 책임을 가진 대통령,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정권은 모두 슬그머니 빠져나가버렸다. 민간 측이 발견한 노트북에 적혀 있는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은 아직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¹⁶ 결국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은 아직 대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권의 책임 범위와 국가의 책임

만약 세월호 침몰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집권 시절에 발생했다면 사고가 대형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질문해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사고가 어느 정도 해

16 민간 측 조사단은 참사 후 60여 일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64 CCTV 저장장치(DVR)를 복구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는 '국정원 지적사항(100개)'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세월호 중·개축과 출항 과정 등 세월호 운항 전반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 문건에는 보안 측정과는 전혀 무관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휴가 계획'까지 포함되어 실제로 경영진이 가질 관심 사항을 담고 있었다." 오영중,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그 내용은...", 《프레시안》, 2015. 1. 2.

당 정부기관과 관료들의 무책임,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책과 해양 안전의 사기업 위탁에 기인한 것이며, 어느 정도 정권의 실질적인 정책의 무게중심과 국민 보호의지, 혹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결과인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다.

박근혜 정권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겉으로는 안전을 중시하는 듯했지만 노무현 정권이 만든 안전 매뉴얼을 팽개치고 안전 전문가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운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박 운행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한 선박이 과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을 채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2009년 이후 이명박 정권과 집권 새누리당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救助)의 영리화' 정책이었다. 해경이 사기업인 언딘에게 구조를 위탁한 것은 정부의 기능 축소와 민간 위탁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결과이므로 구조적으로 이 사고는 국가 시스템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해군의 통영함이 출항하지 못한 것은 해군 비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경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도 오래된 관료사회의 문제점이 누적된 것이므로 단순히 박근혜 정권 차원을 떠난 국가 차원의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간의 루머처럼 해경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양업체인 언딘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민간 잠수자의 구조 지원을 막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현 정권의 책임을 훨씬 넘어서는 국가 시스템, 관료조직의 총체적인 붕괴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모든 관료조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부의 명령과 법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해경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명령에 따른 것이고, 당시의 명령권자는 승객 구조 이외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¹⁷ 해경이 어떤 이유로 승객의 구조는 포기한 채 선원들만 구출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구조 과정에서의 현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이다.¹⁸ 기술적 어려움이나 해류 등 불리한 자연조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04명의 학생과 승객들 중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경 해수부 지휘부,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과 나머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표명할 것인가가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17 김삼열 전 목포시해양심판원장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명령만 기다리느라 유리창 한 장 깨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증언했다. “세월호 내부 대부분 붕괴… 기상관측선도 떠났다”, 《오마이뉴스》, 2014. 10. 15.

18 생존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는 “이 나라 방송은 다 거짓말”이라며, “내가 세월호에서 나와서 진도체육관 가서도 해수부 있는 자리의 123명 선원에게도 배안에 2~300명 있다고 얘기했고, 노란 점퍼 입은 해수부 직원들한테도 거둬 2~300명 있다고 얘기 해도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질 않았다”고 지적한 뒤, “해경도 헬기 타고 와서 딱 한 학생 데리고 올라간 후로 내려와 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세월호 집회, 살려달라고 창문을 때리는 그 광경 ‘어떻게 잊겠느냐!’”, 《서울의 소리》, 2014. 11. 30.

일반 사회와 시민의 책임

아이들을 말 잘 듣는 순종적 존재로 묶어두는 한국의 교육, 교육자와 교육부도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은 기업의 노동 관행은 물론이고, 선원들에게 스스로 무리한 운항을 중지시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¹⁹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묵인해온 정부의 감사기관과, 이런 사실을 고발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 이 모든 기술적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전문가와 학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

구태여 경중을 따지자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반의반의 인민주권’밖에 보장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든 이 정권 최상 권력층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으며,²⁰ 그다음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정권의 책임을 덮는 데 앞장선 거의 모든 언론이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으므로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말한 것처럼, 평소에 자신만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며 정치권과 관료집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았던 시민, 권력 감시 단체에 참여하

19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기업살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들」, 앞의 자료집, 민주노총.

20 어떤 유족은 “다 정리하고 떠날 거예요. 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여객선 침몰] 학부모의 절규 ‘떠날 거예요... 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서울신문》, 2014. 4. 23.

거나 후원하지 않았던 한국의 보통 시민들 모두가 약간씩의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는 바로 그 무책임 때문에 미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²¹

3. 감정정치: 동감의 균열, 혐오와 조롱

한 개인이나 집단이 겪은 슬픔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동감, 혹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담 스미스는 “동감이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류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²² 동감은 언제나 타자를 지향하므로 사회적 관계, 감정으로 이루어진 유대 관계의 실재성을 전제로 한다. 즉, 동감은 사회적 연대를 전제하지만 동시에 연대를 만들어낸다.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도덕은 언제나 감정, 특히 동감의 형태로 존재한다.²³ 그러나 언제나 동감은 슬픔을 직접 겪는 사람들의 감정과 완전한 일치에는 미치지 못한다.²⁴

21 앞에서 인용한 세월호 유족은 또한 “내가 참 못한 부모구나, 자식을 죽인 부모구나. 이 나라에서는 나정도 부모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 지키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해요.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라고 말한다.

22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옮김, 비봉출판사, 2009, 77쪽.

23 김왕배, 「도덕감정: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호, 2009.

24 아담 스미스, 앞의 책, 79~82쪽. “원래 타인의 환희에 완전히 공감하는 것보다는 비애에 완전히 동감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훨씬 어렵다.”

감정의 정치화

비극이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유에서만 발생했다면 동감과 애도는 그것 자체로 그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나 목격자가 분노, 즉 ‘정의의 감각’을 가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세월호 유족들도 계속 슬퍼만 하고 있었다면 동감은 정의감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지속되거나 점차 사그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거짓된 언론보도와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대응을 목도한 대다수 국민도 그들과 함께 분노를 품게 되었다. 이때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는 단순한 동감에 머물 수 없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안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상 규명과 처벌, 즉 정의를 호소하는 순간, 그들은 정권과 권력자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 다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비해 세월호 가족들의 분노 표출은 매우 절제된 것이었지만, 자식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유에 대해 따지지 않을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동감이 분노와 정의감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 보도를 통제했고 대다수 방송은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피해 유족의 육성은 언론에서 사라졌고 SNS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던 구조 과정의 의혹과 문제점은 공중파와 종편에서 방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들의 집단행동을 제지하고 감시하느라 바빴고, 현장에서 정부의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시켰다. 경찰의 감시와 사찰 속에서 유족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동감을 정치적 공격의 자원으로 동원하려

하자 사건 초기에 광범위하게 생겨났던 동감의 분위기도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감정은 정치화되었다.

동감 허물기

원래 동감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적정성’에서 나온다. 아무리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동감을 얻어 마땅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비애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점을 갖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감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감이 사라지거나 짜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동감의 분위기가 압도적인 초기에는 무시하고 관망하다가 동감의 정도가 벌어지고 유족과 사회단체의 성원 일부가 감정을 정치화하려 하자 동감을 철회할 명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언론이 이 작업을 주로 담당했다. 동감의 기반을 허물기 위한 꼬투리 잡기는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일보》와 공중파와 중편은 동감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영오 씨의 사건 발생 초기 다소 과격한 발언과 출신 지역, 노조원이라는 위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부족했던 점 등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안을 찾아내 동감을 약화시키고 동감을 거부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소재로 삼아 보도했다. 이것은 이제 애초에 가졌던 동감을 점점 피로감으로 전환시킨 개개인의 태도 변화보다 훨씬 더 비열한 권력 행사였다. 이런 언론 보도는 김영오 씨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거

의 동시에 진행되었다.²⁵ 핵심 권력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증거였다.

동감을 약화시키는 데 또 다른 좋은 소재는 분노하고 항의하는 개인의 약점을 잡는 것과 더불어 이들의 요구가 무리라는 것을 부각시키거나 조작하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유족들을 자식 팔아 이익이나 챙기려는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렇게 되면 유족들의 항의나 요구에 대해 약간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감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초기의 동감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면서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정치화될 수밖에 없었다. 여당과 언론은 유족들이 아무리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호소해도 외부의 과격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정치행동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안산의 상인들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세월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언론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구원과 쪽으로 돌렸고, 이들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이들에게 쏘도록 유도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후 100일쯤 지난 지난해 8월 이후 여당과 보수 언론은 동감의 균열과 차단, 분노의 전이, 적극적으로 농성을 조롱하는 우군 세력의 동원 등 집권세력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치적 공격을 감행했다.

25 “세월호 가족위, ‘국정원이 유민아빠 사찰’ 폭로”, 《노컷뉴스》, 2014. 8. 24.

혐오의 조장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빠진 비극의 주인공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는 그들의 재난을 경시하는 것이다. 친구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이다.²⁶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을 경청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비웃거나 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유족들에 대한 이런 모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도덕과 예의가 중요한 매체가 되는 상호작용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이지만, 특정 사건이 정치화될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세력과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동감의 여지를 막고 혐오를 조장한 일은 오래된 수법이다. 한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동감의 표시는 사회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동감을 표시해서는 안 되는 대상과 사건이 있다. 한국전쟁기 학살 피해자, 조작 간첩, 고문 피해자, 노조 활동가를 권력은 ‘빨갱이’라고 지목하고 그들의 비극은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공공공연하게 규정했다. 권력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낙인찍고 따돌리고 기피하도록 가르쳤다. 피해자의 자식들이 권력의 가르침을 받은 순진무구한 동네 어린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감을 얻으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26 아담 스미스, 앞의 책, 16쪽.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이들은 도덕적 책임과 동감의 영역, 밖에 있었고, 한국인이 아니었으며, 인간도 아니었다.²⁷

국가에 의해 공식화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 미망인들은 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공개적으로 울 수조차 없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몰자에 대한 애도는 국가의 공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유족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²⁸ 유족의 집합적 애도는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향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고전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안티고네의 이야기처럼 국가는 애도할 수 있는 죽음과 애도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언제나 구분한다. 애도해서는 안 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는 반역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애도의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세월호 유족의 작은 약점을 부각시켜 찬물을 끼얹으려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실질적인 ‘정치적 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패배자’들은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 세력, 즉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경쟁의 논리에 편승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부자를

27 김동춘, 『전쟁정치』, 길, 2013 중 “제2장 국가폭력의 유형과 그 피해자들”을 참조.

28 현충일 제정 후 유족은 국가 행사의 들러리가 되었고 유족은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없었다.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 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중 “제5부 봉쇄된 균열”을 참조.

선망할 경우에는 위협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를 향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항의할 때는 곧바로 역공이 펼쳐진다. 그들이 질서를 어기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범죄), 집단적으로 불평하거나 항의할 경우(테모), 그들은 위협 세력으로서 '치안'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과거에 레이건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그랬듯이 정권은 이들의 산발적이고 표출적인 저항이나 일탈 행동을 과대 포장하고 위협 대상으로 표적을 삼은 다음 일부를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치안국가의 수립을 정당화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렇듯 스스로의 모순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범죄자들에게 전이시킨다.²⁹ 재난 피해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재난의 경우에도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홀대와 무시가 드러나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순간 그들의 행동은 곧 정치적인 것이 된다. 현재 중국 공안의 주요 역할이 바로 고립 분산된 재난 피해자의 항의를 진압하는 일이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혐오

어떤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가해자 처벌을 주장할 경우,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피해와 고통의 기억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며 “나도 너 만큼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에는 아주 많다. 참혹한 전쟁

29 신자유주의와 치안국가의 공존, 신자유주의적 형벌국가에 대해서는 로익 바캉, 『가난을 엄벌하다』, 류재화 옮김, 시사HN북, 2010 참조. 박근혜 정권이 내건 '4대약 체결' 구호도 그것의 일종이다.

과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개발독재의 주역이었던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그들이다. 이 세대에게는 그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살아온 데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건의 희생자들이 정부를 향해 특별한 보상이나 대우를 요구한다고 생각되면 동감을 곧바로 거부감으로 전환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 역시 조건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60년대에 청년이었던 저학력 고연령층이나 2000~2010년대에 청년인 신세대들이 가진 공통점은 한번도 권력에 집단적으로 맞서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며 언제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면서 해결해왔다는 점이다.³⁰ 더욱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동감의 필수적 기반인 사회적 연대가 더욱더 해체된 상태다. 모든 책임은 개인화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은 있어도 동감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능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다.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사실상 한 나라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와 빈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사회적·공간적 거리가 커졌다. 도덕공동체로서 작동하기에 사회가 이미 심각하게 해체된 것이다.

힘든 처지에 있던 혹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에 견주어 세월호 유족들이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30 울리히 벡이 말한 '위험의 개인화'는 배경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Ulrich Beck, pp. 87~150.

고 생각하고, 동감을 분노와 혐오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여당과 방송, 특히 종편은 이를 부채질하며 세월호의 유가족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없는 자녀 대학특례입학이나 보상금 요구를 사실인 양 슬쩍 내비취 ‘특권’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책이 아닌 종편만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는 저학력·저소득·고령층이 세월호 유족들을 과거에 국가유공자 자격을 요구한 광주 5·18 유족들처럼 취급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가 되었고 유족들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³¹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한 보상과 혜택의 요구’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상처를 건드린 셈이 된 것이다.

이렇게 2014년 한국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특권층’으로 둔갑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사고 직후에 부채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부채감을 털어버릴 명분을 찾았고, ‘도덕 감정’은 완전히 전도 돼버렸으며, 국가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가해 주체들은 책임 범위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경제적으로 힘겨운 유족들을 일대일로 접촉해서 포섭하거나 분열시키고, 현장의 목격자들이나 증언자들까지 매수하거나 입을 다물게 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와 종편 등 언론은 낮은 수준의 동감의 기반을 갖고 있거나 희생자들과의 사회적·공간적 거리

31 유중호, “이젠 평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동아일보》, 2014. 6. 2; 천관율,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HN》, 2014. 9. 29.

때문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재와 거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동감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혐오감을 확대시켰다. 그것이 단식농성을 하는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공개적인 조롱 행동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사건이 권력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실상 ‘전쟁’을 한 셈이었다.

안보 국가가 행사한 폭력과 사찰의 오랜 경험을 가진 채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겪은 한국사회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파괴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난 이후 그나마 형성된 동감과 연대를 자원으로 해서 새로운 도덕 동공체로 거듭날 기회를 또 다시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적인 격변기에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집단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동감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은 언제나 정치권력이었다. 오늘날 혐오와 조롱의 극단적인 분위기는 현 권력의 부도덕성과 박근혜 정권의 피해망상증, 그리고 ‘돈이 전부’이고 도덕 공동체가 파괴된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에 띄우는 제언

세월호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평화 시에 발생한 최대 민간인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충격과 기억은 오랜 기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의 침몰과 구조 과정이 모두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정권, 기업의 탐욕, 잘못된 사회 관행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사망자의 다수를 압도적으로 차지했으며, 구조될 수도 있었던 학생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 정치 문화와 ‘성공, 물질 만능주의’라는 잘못된 제도·의식·행동의 피해자들이다.

곧 출범할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수사권의 한계와 책임 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어렵지만, 조사 후 위원회가 내릴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와 별도로 민간 측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사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어떻게 국가, 정치권과 사회가 되새김질하여 자기 쇄신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규제 완화 행진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대형 재난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국민 다수는 여전히 유족들의 슬픔에 동감하며 부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기억저장소를 만들었으며 단식농성을 함께했다. 이 도덕 감정의 소지자들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사회를 재건할 주체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위험사회에서 가난과 위협의 ‘개인 책임’ 이데올로기, 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깨는 작업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고 수십 명을 구조한 사

람들도 그들이다. 이처럼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생명과 안전 가치를 사회 각 영역의 과제로 체질화하고 정치세력이 위협과 재난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된 국민의 편에서 제도 변화를 꾀하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